

김정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포함해야… 국회 통과 총력”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감

산업 프로젝트 신속 추진 강조

원전 국내의 업무 분리 비효율 지적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공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에 노동 규제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산업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부처 간 조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 부는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 현장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지만, 노동 관련 특례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이 빨리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노동 관련 예외조항의 필요

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답당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아마 사회적 논의를 거처지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사업에서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됐는지,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5조 원 중에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남광주시가 판단한 것”이라며 “지방정부 입장에서 1조5000억원을 특별히 이곳에 쓰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에너지 업무가 분리된 데 대해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함은 없지만 이렇게 (개편)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 체제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 원전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한다.

공급망 안정과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과 관련해 “이른 부분”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정상화시켜 기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공동투자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협계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고물가·소비 부진에 창업, 5년째 ‘감소’

데이터처, 작년 신생기업 9년래 최소 창업해도 3곳 중 1곳은 1년 못 버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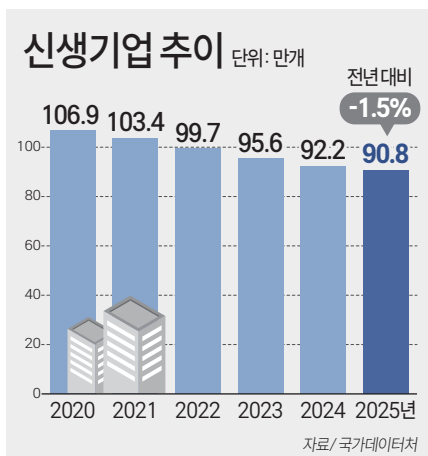
지난해 새로 생겨난 기업 수가 9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물가 및 소비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신생기업 수는 전년대비 1만4000개 감소한 90만8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88만4000개) 이후 9년 만에 최소 수준이다.

신생기업은 2020년 106만9000개에서 2021년 103만4000개(-3.3%), 2022년 99만7000개(-3.5%), 2023년 95만6000개(-4.2%), 2024년 92만2000개(-3.5%)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물가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신생기업이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2·3계업 여파 및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 창업에 소비 부진 타격이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 신생기업 수는 12만8000개로 1만6000개



(11.0%) 줄었다. 부동산업은 15만5000개로 1만5000개(8.6%) 감소했다.

제조업은 3만2000개로 5.5%, 건설업은 4만4000개로 7.1% 줄었다. 반면 도·소매업 신생기업은 24만4000개로 전년대비 1만4000개(6.2%) 늘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도 각각 8.5%, 6.1%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업을 제외한 신생기업은 75만4000개로 전년대비 0.1% 늘었다. 전체 신생기업 감소에 부동산업 부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셈이다.

전체 활동기업에서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인 신생률은 11.7%로 전년대비 0.

3%포인트(p) 하락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를 둔 활동기업은 774만8000개로 전년대비 10만6000개(1.4%) 증가했다. 도·소매업에서 3만개(1.9%), 개인서비스업에서 1만9000개(5.0%)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업에서는 1만2000개(1.3%) 줄었다.

2023년 신생기업 중 이듬해까지 1년간 생존한 기업 비율(1년 생존율)은 63.9%로 전년대비 0.5%p 하락했다. 새로 생긴 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는 의미다.

1년 생존율은 2023년 64.4%로 전년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이 70.3%로 3.2%p 떨어졌고, 부동산업은 64.6%로 1.3%p 낮아졌다. 반면 농림어업은 57.7%로 6.9%p, 교육서비스업은 67.5%로 4.0%p 상승했다.

2019년 신생기업이 2024년까지 생존한 비율인 5년 생존율은 36.5%로 전년대비 0.1%p 올랐다. 2016년 이후 8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신생기업 3곳 중 2곳가량은 5년 뒤 생존하지 못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보령에 고성능 전기차 평가 인프라 구축

한자연, 2.5만rpm 구동계 시험 가능

국내 고성능 친환경차 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 충청남도 보령에 들어섰다. 완성차부터 개별 부품까지 아우르는 ‘고성능 전기차 통합 평가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그간 고비용 시험 장비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내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미래 전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한자연)은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고성능 전동화센터’의 핵심 평가인프라인 ‘초고속 구동계 다이내모미터’와 ‘전기차 전용 무향실 차대동력계’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험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프라 구축은 산업통상부와 충청남도, 보령시가 뜻을 모아 총 198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98억원)을 투입한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 현대차 아이오닉 5 N 등 고성능 전기차를



한국자동차연구원 고성능 전동화센터에 구축한 전기차 전용 무향실 차대동력계 장비 /한자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모터 회전수가 분당 수만 회에 달하고 출력이 수백 마력을 상회하는 고성능 전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한자연은 이번 고성능 전동화센터 가동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난제를 해소했다. 우선 ‘초고속 구동계 다이내모미터’는 최대 회전수 2만5000rpm(분당회전수), 출력 400kW(약 540마력)급에 달하는 고성능 구동계의 성능을 극한까지 시험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석탄발전 첫 추월

전체 설비용량의 25.4% 차지

대한민국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석탄발전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LNG(액화천연가스)에 이어 제2의 발전원으로 올라섰다.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2~3년 내 LNG를 넘어 국내 최대 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총용량이 4만1040MW(메가와트)로 집계돼, 석탄발전 설비용량 4만757MW를 283MW 상회했다.

이번 역전으로 재생에너지는 전체발전설비의 25.4%를 차지하게 되며, LNG에 이어 설비용량 기준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전원으로 올라섰다. 현재 설비용량이 가장 큰 LNG는 4만6788MW로, 재생에너지와의 격차는 약 5748MW로 바짝 좁혀진 상태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보급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으며, 2020년대 들어서도 신규설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전통적 주력발전원인 석탄발전과의 설비용량 격차를 좁혀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公,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

종이서류 없애고 절차 단축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임대수탁(임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이서류 없이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이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각종 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를 서명 단 한 번으로 간소화했다. 21

일 개편된 서비스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러 가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7종의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했다.

이제 등기부등본도 직원이 직접 열람하도록 바뀌 이용자가 별도로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제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입력되

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임대수탁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 없이 농지은행에서 변경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